

TRADE BRIEF

수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시사점

친환경 전환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탄소배출 정보를 포함한 ESG 공시 의무화 등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수출기업 408개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95.6%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약 85% 기업이 기후위기가 경영활동 및 수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해 수출현장에서 기후위기를 대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소배출 규제'와 '재생에너지 의무사용(RE100 등)'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다수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으며, 대응계획조차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약 40%에 달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가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비용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조치도 에너지효율 개선 등 단기적 비용절감 조치에 치중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들의 부담 요소를 줄이기 위해 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특히 기업 규모가 작고 수출 경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기업 규모와 수출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 비용 절감 조치를 넘어 기업들이 기후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신시장 선점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장기적 차원의 제도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린전환팀

장현숙 수석연구위원 02-6000-5463, hs.jang@kita.or.kr

황준석 연구원 02-6000-5617, Jeff@kita.or.kr

임지훈 수석연구위원 02-6000-5177, tradewing@kita.net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 2022년 기준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응답업체수	■ 총 408개 기업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전화 조사
조사기간	■ 2023년 7월 28일~2023년 8월 28일

조사 내용

기업 인식	- 기후위기 대응 중요도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규제 영향성
	- 기후위기의 경영활동, 수출 영향도	- 이해관계자별 기후변화 대응 압박 정도
대응현황	- 기후변화 대응 여부	- 기후변화 미대응 이유
	- 동종업계 대비 탄소중립 대응수준	-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애로사항
	- 탄소저감 활동의 기업 이익	- 기후변화 관리, 완화 및 적응조치
	- 필요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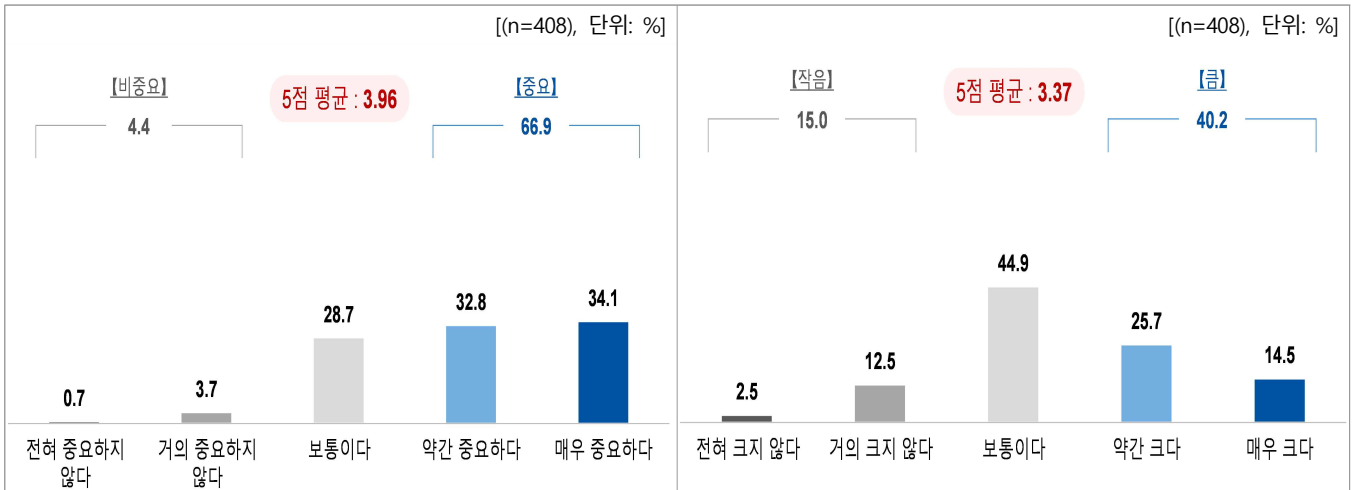
전체(개, %)		(408)	100.0
기업 규모	소기업	(176)	43.1
	중기업	(171)	41.9
	중견기업	(52)	12.7
	대기업	(9)	2.2
수출 경력	3년 이내	(19)	4.7
	4년 이상~8년 미만	(80)	19.6
	8년 이상~16년 미만	(148)	36.3
	16년 이상~31년 미만	(127)	31.1
	31년 이상	(34)	8.3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	(81)	19.9
	100만 달러 이상~300만 달러 미만	(135)	33.1
	300만 달러 이상~500만 달러 미만	(56)	13.7
	500만 달러 이상	(136)	33.3
주요 수출시장	중국	(68)	16.7
	미국	(95)	23.3
	일본	(60)	14.7
	베트남	(38)	9.3
	EU	(44)	10.8
	ASEAN(베트남 제외), 인도	(44)	10.8
	중동·아프리카	(28)	6.9
	러시아·CIS	(11)	2.7
	중남미	(9)	2.2
기타	(11)	2.7	

I 기후위기 대응 인식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수출기업 대부분은 기후위기가 경영활동이나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인식
 - 응답자 95.6%가 기업활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보통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답함
 - 이는 2022년 7월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탄소중립 추진 관련 별다른 압박이 없거나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한 중견·중소기업 비율이 각각 71.2%, 87.8%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높아진 수치임
 - 기후위기가 기업 경영활동이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답한 기업은 15.0%에 불과, 나머지 85.0%(보통 44.9%, 크다 40.2%)의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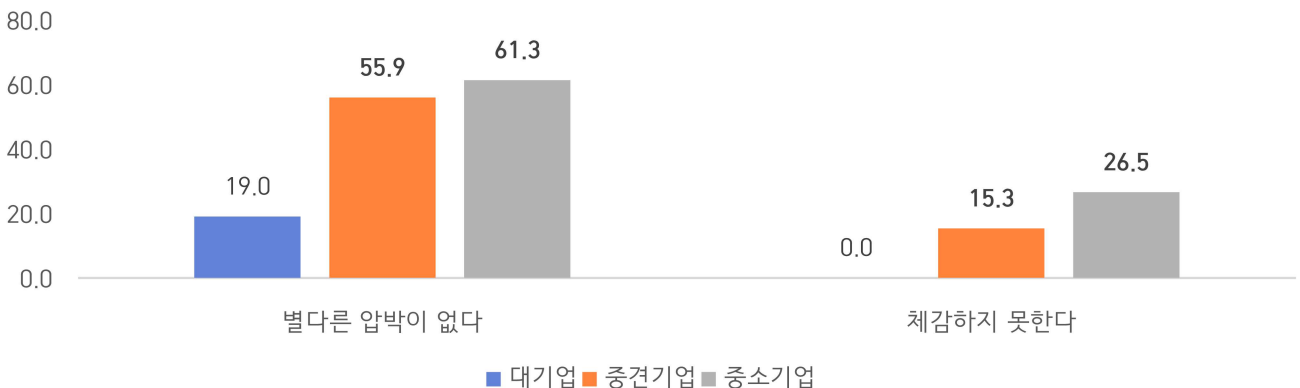
<기업활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도>

<기후위기가 경영활동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체감 정도(2022.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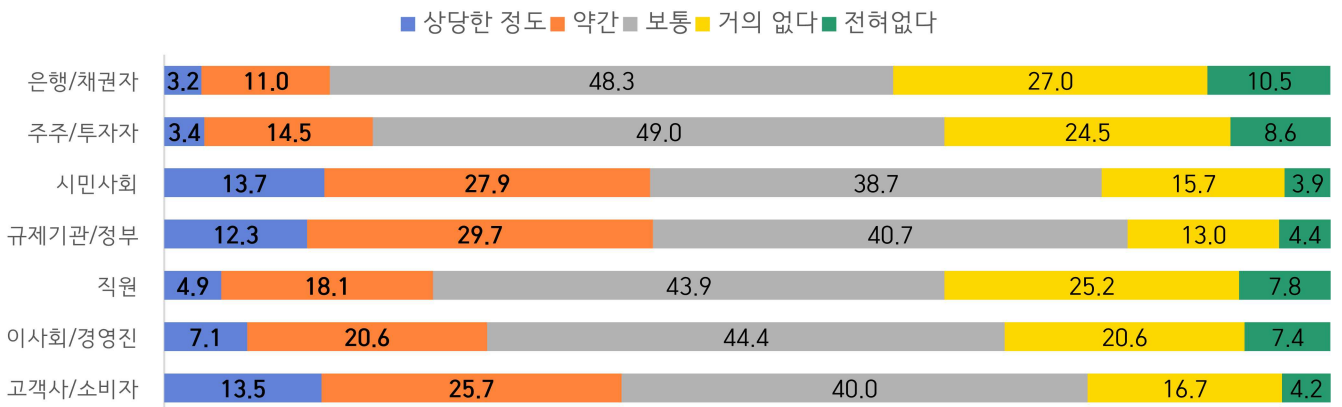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

-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는 압박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 대부분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규제기관이나 정부(41.9%)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압박을 받는다는 기업이 가장 많았음
 - 그 외 시민사회(41.7%), 고객사/소비자(39.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주/투자자나 은행/채권자 등 금융부문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압박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이해관계자별 기후변화 대응 압박감>

[(n=408), 단위: %]



- 기업 규모와 수출액이 클수록, 수출 경력 기간이 길수록 고객사 및 소비자로부터의 압박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함

<기업특성별 고객사 및 소비자로부터의 기후변화 대응 압박감>

[(n=40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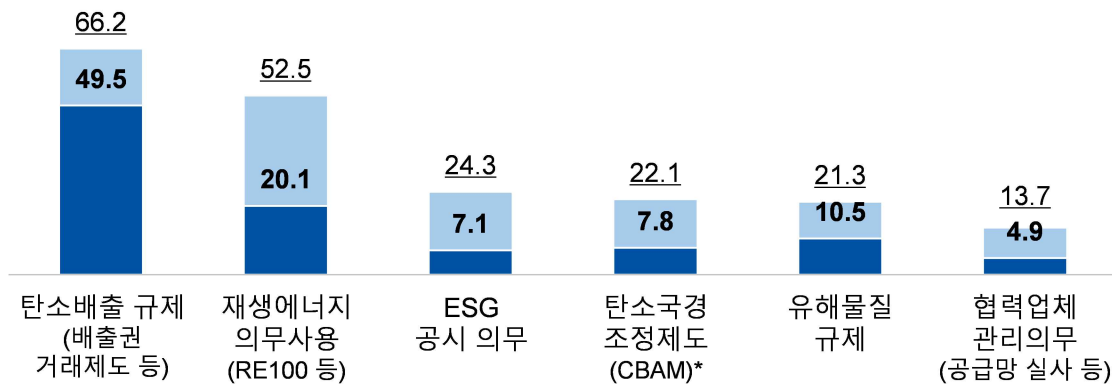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5점 평균]
■ 전체 ■		4.2	16.7	40.0	25.7	13.5	3.28
기업 규모	소기업	8.0	16.5	38.1	22.7	14.8	3.20
	중기업	1.2	17.5	43.3	25.7	12.3	3.30
	중견기업	1.9	15.4	36.5	34.6	11.5	3.38
	대기업	0.0	11.1	33.3	33.3	22.2	3.67
수출 경력	3년 이내	5.3	21.1	47.4	15.8	10.5	3.05
	4년 이상~8년 미만	5.0	21.3	35.0	23.8	15.0	3.23
	8년 이상~16년 미만	6.1	15.5	37.8	29.1	11.5	3.24
	16년 이상~31년 미만	1.6	16.5	44.1	22.8	15.0	3.33
	31년 이상	2.9	8.8	41.2	32.4	14.7	3.47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	8.6	16.0	44.4	14.8	16.0	3.14
	100만 달러 이상~300만 달러 미만	5.2	20.0	36.3	23.0	15.6	3.24
	300만 달러 이상~500만 달러 미만	1.8	12.5	46.4	32.1	7.1	3.30
	500만 달러 이상	1.5	15.4	38.2	32.4	12.5	3.39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출기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응답 기업 66.2%가 ‘탄소배출 규제(배출권 거래제도 등)’ 를 꼽음
- 그 외 ‘재생에너지 의무사용(RE100 등)’ (52.5%), ‘ESG 공시 의무’ (24.3%) 등이 수출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

<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대응 규제(중복응답)>

[(n=408), 단위: %, 중복응답]

■ 1+2순위 ■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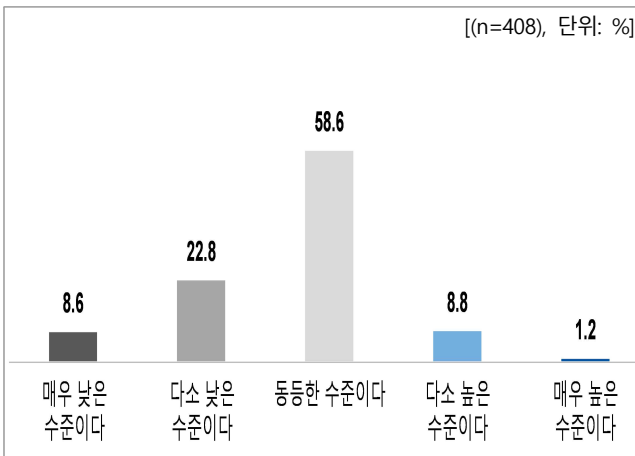


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 간 감축의욕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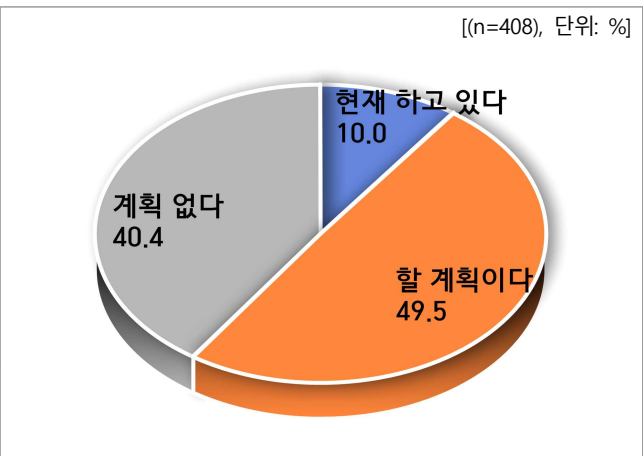
II 수출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

- 국내 수출기업의 약 68.6%가 국내외 동종업종 경쟁업체 대비 동등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반수 기업(58.6%)이 경쟁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탄소중립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응답
- 반면 탄소중립 대응 수준이 낮다(매우 낮은 수준+다소 낮은 수준)는 응답은 31.4%로, 대응 수준이 높다(다소 높은 수준+매우 높은 수준, 10.0%)는 응답 대비 높게 나타남

<동종업종 경쟁업체 대비 탄소중립 대응 수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활동 여부>



- 현재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하는 수출기업은 10개사 중 1개사에 불과한데, 이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수출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이나 적응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현재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10% 수준이었으며, 절반 정도(49.5%)가 앞으로 할 계획이라 밝힘
- 기업 규모가 크고 수출 경력 기간이 길수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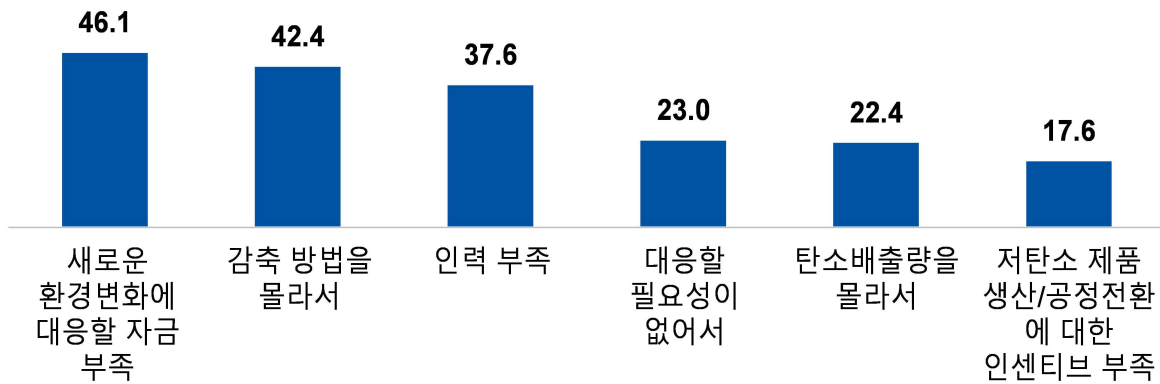
<기업규모 및 수출 경력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비율>

기업규모	응답비율	수출 경력(2022년 기준)	응답비율
소기업	7.4	3년 이내	0.0
중기업	8.8	4년 이상~8년 미만	6.3
중견기업	17.3	8년 이상~16년 미만	8.1
대기업	44.4	16년 이상~31년 미만	11.0

- 반면에 계획조차 없는 기업이 40.4%에 달해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 부족’ 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수출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 그 외 ‘감축 방법을 몰라서’ (42.4%), ‘인력 부족’ (37.6%), ‘대응할 필요성이 없어서’ (23.0%) 등의 순임
 -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몰라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탄소배출 저감 컨설팅 지원이 필요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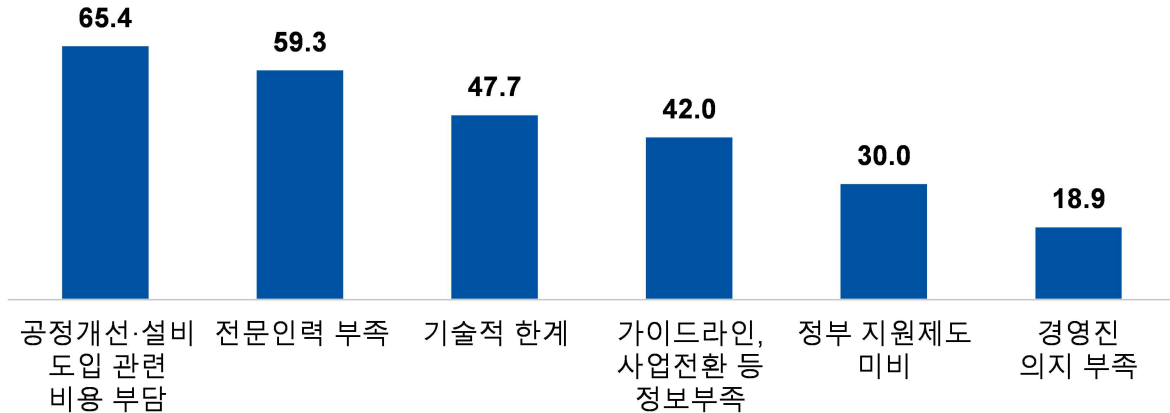
[대응 활동을 안하는 기업(n=165), 단위: %, 중복응답]



- 대응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공정개선·설비 도입 관련 비용 부담’ 이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응 전후 모두 비용이 수출기업에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분석됨
 - 다음으로는 ‘전문인력 부족’ (59.3%), ‘기술적 한계’ (47.7%), ‘가이드라인, 사업전환 등 정보부족’ (42.0%) 등의 순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 과정의 애로사항(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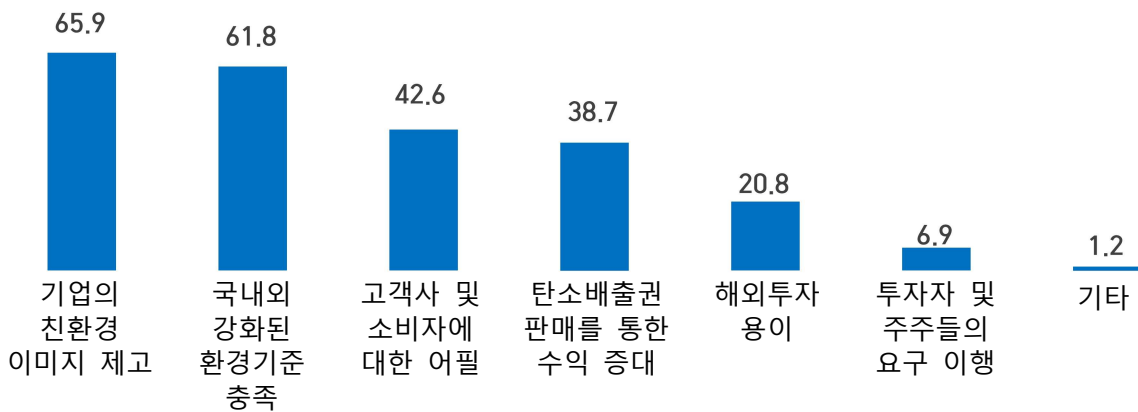
[대응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인 기업(n=243), 단위: %, 중복응답]



- 탄소저감 활동을 통해 기업이 얻게 될 이익으로는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가 65.9%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외의 강화된 환경기준 충족’ (61.8%), ‘고객사 및 소비자에 대한 어필’ (42.6%) 등이 뒤를 이음
-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증대를 선택한 기업도 38.7%에 달해 주목할 만하며, 탄소저감 활동이 일부 기업(20.8%)에게는 해외투자에도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음
 - 앞서 이해관계자별 기후변화 대응 압박감 관련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투자자 및 주주들의 요구이행이 미치는 영향도(6.9%)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탄소저감 활동으로 얻는 이익(중복응답)>

[n=408], 단위: %]



- 국내 수출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은 주로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조치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
- 61.0%의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 조치로 에너지효율을 높인다고 응답했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장비를 사용한다는 기업도 48.0%를 차지하며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단기적 효과가 큰 조치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도 높아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즉각적인 비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처방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응답 기업의 36.3%가 대체 공급망 발굴(공급망·물류에서 탄소배출 감축)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험가입이나 공장 이전 조치를 취하는 비율은 15% 내외에 불과해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반면 기후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기회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51.2%에 달해 수출기업들의 대응에 있어 주목할 만함

<기후변화 관리·완화 및 적응 조치 여부>

(n=408), 단위: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수출기업 지원정책은 ‘설비교체 등 비용 지원’ (63.2%, 1+2순위 합산)으로 조사되며, 비용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앞서 조사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조치로 행해지는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장비 사용과 같은 단기적인 비용절감 방안과 부합되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정책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을 가장 선호
- 응답 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설비교체 등 비용 지원’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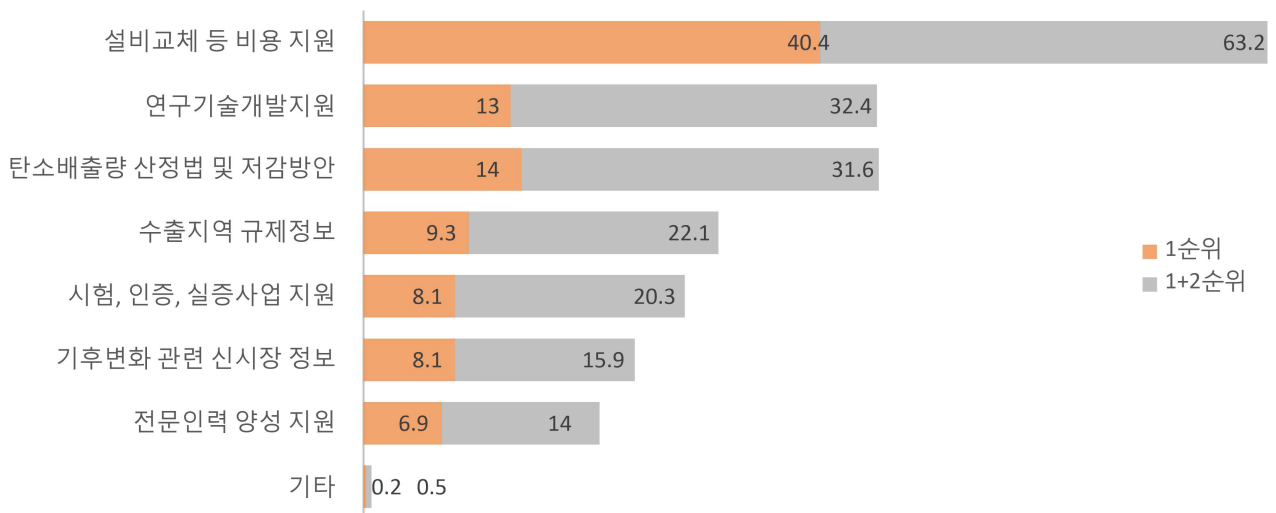
<기업 규모별 설비교체 등 비용지원 선택 비율(1+2순위 합산)>

규모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응답률(%)	65.9	63.2	57.7	44.4

- 이 외 ‘연구&기술개발 지원’ (32.4%, 1+2순위 합산), ‘탄소배출량 산정법 및 저감방안’ (31.6%, 1+2순위 합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높게 나타나 기업들의 기술·정보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195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한국을 포함해 80여 개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법과 저감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해 지원이 절실
- 탄소배출 저감은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달성이 가능한 만큼 기업을 위한 맞춤형 배출량 산정법 및 저감방안과 더불어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수출기업 지원 정책(중복응답)>

[전체(n=408), 단위: %]



III 결론 및 시사점

- 친환경 전환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ESG 공시 의무화 등 각종 기후변화 대응 규제가 추진됨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 많은 수출기업이 바이어나 공급망 원청업체들로부터 탄소배출량 정보나 감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경영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이 수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등극
 - 무역협회가 2022년 7월 실시한 설문조사 대비 중소·중견기업의 기후변화 체감도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이 대기업뿐 아니라 전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례]

서울 소재 수출기업 A사는 BMW 등 선진국 자동차메이커에 자동차부품을 납품 중인데 원청업체가 재생 에너지 사용 계획을 포함한 탄소 감축 계획을 제출할 것을 통보해 음. 국내 재생에너지원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정도로 재생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애로가 큼¹⁾

- 대다수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활동이 미미한 기저에는 비용 부담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한 상황
- 또한 배출량 산정법 및 감축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해 해당 분야 애로 해소가 시급

[사례]

경기 소재 플라스틱 제조·수출업체 B사는 다회용(Multi-Use)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국내외 다양한 산업(물류센터, 자동차부품 공장 등)에 판매·렌탈 중임. 고객사에 파레트, 포장용기 등을 다회용 제품으로 제공함에 따라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감축이 아닌 관계로 정량적 산출이 어려움. 해외 경쟁사(물류용기 렌탈업체)는 이미 정량화된 온실가스 감축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수출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²⁾

- 따라서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이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규모와 수출 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1) 새 정부에 바라는 수출현장의 목소리(한국무역협회, 2022)

2) 상계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및 가장 큰 부담 요소로 기업들이 ‘비용’ 을 꼽음에 따라 금융적 지원을 확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한 금리 부담 완화, 대출·보증 한도 확대, 대출 상환 및 이자 납부 유예 등의 정책 지원 필요
 -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4.)’ 에서 세액공제 등 지원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 저탄소 전환을 표방한 바 있음
- 특히 기업 규모가 작고 수출 경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설비교체 등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 현재 기업 대응이 단기적 비용 절감 조치에 편중된 상황에서, 친환경을 키워드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후 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돕는 중장기적 차원의 지원 제도가 필요
- 친환경적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하는 기업이 51.2%에 달하는 점은 고무적이며, 기술개발 지원 등 이를 더욱 장려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넘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배출량 산정법 및 저감방안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수출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정부 지원방안>



- ◎ 기업들도 단기적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국내외 환경기준 충족을 통한 시장점유율 향상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공정·공급망 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장 효율적인 감축방안을 탐색 및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 단계적 대응전략을 수립해 대응

<수출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